

독립보고기구 (IRM):

대한민국 기간 최종보고서 2014–2016

Geoffrey Cain
독립연구원
제 2 기간 최종보고서
Second End-of-Term Report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IRM): SOUTH KOREA END-OF-TERM REPORT 2014-2016

South Korea has made progress increasing data disclosures and engaging citizens to design data policies. Civil society is still concerned over the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data disclosure. Moving forward, the government could improve transparency by publishing transcripts and minutes from stakeholder consultation activities to show how citizen's views are incorporated in policy planning.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is a voluntary international initiative that aims to secure commitments from governments to their citizenry to promote transparency, empower citizens, fight corruption, and harness new technologies to strengthen governance. The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IRM) carries out a review of the activities of each OGP participating country. This report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period April 2014 to July 2016 and includes some relevant developments up to December 2016.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began participating in OGP in September 2011. South Korea's Ministry of the Interior (MOI) is the lead institution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OGP activities. MOI is also responsible for the general coordination of public service in the country, including e-governance initiatives.

Commitments were carried out by a number of relevant bodies, including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s Government Officials Ethics Committee. Civil society groups attended ministry-organized meetings such as the Open Data Korea Forum, where they were informed of and held discussions on government policy, but direct influence on those policies appears to be limited.

South Korea published its third action plan in October 2016, and has carried forward three commitments from the second action plan.

TABLE 1: AT A GLANCE

NUMBER OF COMMITMENTS: 5
NUMBER OF MILESTONES: 18

LEVEL OF COMPLETION

	MIDTERM	END-OF-TERM
COMPLETED:	0	1
SUBSTANTIAL:	1	2
LIMITED:	3	2
NOT STARTED:	1	0

NUMBER OF COMMITMENTS WITH:

CLEAR RELEVANCE TO OGP VALUES:	5	5
TRANSFORMATIVE POTENTIAL IMPACT:	0	0
SUBSTANTIAL OR COMPLETE IMPLEMENTATION:	1	3
ALL THREE (★):	0	0

DID IT OPEN GOVERNMENT?

MAJOR:	N/A	0
OUTSTANDING:	N/A	0

MOVING FORWARD

COMMITMENTS CARRIED OVER TO NEXT ACTION PLAN:	3
---	---

Table 2: Overview: Assessment of Progress by Commitment

COMMITMENT OVERVIEW	SPECIFICITY				OGP VALUE RELEVANCE (as written)				POTENTIAL IMPACT				COMPLETION		MIDTERM		DID IT OPEN GOVERNMENT?				
	None	Low	Medium	High	Access to Information	Civic participation	Public Accountability	Technology & Innovation for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None	Minor	Moderate	Transformative	Not started	Limited	Substantial	Complete	Worsened	Did not change	Marginal	Major	Outstanding
1a. Strengthening Public-Private Collaboration		X			X	X		X		X				X							
															X				X		
1b.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X					X			X				X				X			
															X						
2c. Enhancing Information Disclosure			X		X	X	X				X			X						X	
														X							
2d. Strengthening Public Service Ethics			X		X	X	X			X			X							X	
														X							
3.e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Utilize Public Data			X			X	X				X				X					X	
																X					

독립보고기구 (IRM): 대한민국 기간 최종보고서 2014-2016

대한민국은 데이터 공개를 강화하고 시민의 데이터 정책 설계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 사회는 여전히 정부의 데이터 공개 투명성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해관계자 자문활동의 기록물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 (OGP)은 자발적인 국제 이니셔티브로 투명성 증진, 시민 권한 부여, 부패 방지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공약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보고기구 (IRM)는 각 OGP 회원국의 활동을 검토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4 년 4 월부터 2016 년 7 월까지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2016 년 12 월까지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1 년 9 월에 OGP에 공식 가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자치부가 OGP 활동을 조정하는 주관부처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전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공공 서비스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국민권익위원회(ACRC), 행정자치부 및 인사혁신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국가오픈데이터포럼 (Open Data Korea Forum)과 같은 정부 주최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토론을 벌여 왔으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 년 10 월에 세 번째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3가지 공약이 두 번째 행동계획에서 이월되었습니다.

표 1: 훑어보기

공약 수: 5
마일스톤 수: 18

이행 수준(공약 수준)

	중간	최종
완료:	0	1
상당한:	1	2
제한적:	3	2
미착수:	1	0

관련 공약 수:

OGP 가치와의 명확한 관련성:	5	5
변혁적 잠재적 영향:	0	0
상당한 수준 또는 완료:	1	3
3가지 모두 해당 (★):	0	0

정부개방에 기여했는가?

주요한 기여:	0	0
상당한 기여:	0	0

향후 이월 여부

차기 행동계획으로 이월된 공약의 수:	3
----------------------	---

이행 기간 중 시민사회와의 협의

OGP회원국들은 OGP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동안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행 중 협의 과정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은 분산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행 초기 단계에는 국가 정보 기관, 행정자치부 및 여러 위원회의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원 선발 방법, 회의 내용, 정책 입법 구성 방법 등 해당 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웹 사이트에는 회의기록이 게시되지 않았으며, 주요 한국어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검색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이행 후반기에 OGP 공약을 지키고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0일 및 2016년 9월 22일 (이행기간 이후) 행정자치부 및 4명의 시민 사회 대표 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사회 단체는 대화의 의미 및 자신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6년에 진행된 정부와 시민 사회 간 회의 의사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록은 시민 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CSO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OGP 회원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향후 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정확한 방법이나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IRM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의 이해관계자 및 정부간 토론을 담은 한국어로 된 짧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 12월, 이행 기간 전, 정부는 행정자치부 및 민관 부문의 35명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ODSC)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위원회는 협의 작업의 기초 특히, 오픈데이터 공약에 관한 협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¹ ODSC 참여 위원은 행정자치부 웹 사이트의 ODSC 온라인 디렉토리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오픈데이터 공약과 관련된 열린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스터 플랜²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자치부 웹 사이트 및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웹 사이트에 다양한 제목³으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문서를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전 행정자치부 고문이자 경성대 정보학 교수인 정충식 교수는 학술지에 ODSC 회원 100명 중 전략위원회에서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위원장 또한 이 외의 위원들은 몇 개의 다른 정부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⁴. 이는 ODSC가 보다 광범위한 시민 사회 공동체를 포함하기 보다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인물들로 구성되어 “일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위원회가 정책 결정이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토론을 중재하기 보다는, 사실상 심의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 정책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⁵. 정충식 교수에 따르면, 정부 3.0위원회가 결성되기 전 해당 위원회의 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둘러싼 행정적 혼란이 있었으며, 공무원들은 성과목표 달성⁶이라는 압박으로 인해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CSO 합의는 대한민국이 진보적인 공개법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시행을 위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프레임워크가 부족하여,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정부 3.0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¹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http://www.odsc.go.kr/user/nd10191.do>.

²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 데이터 공개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www.odsc.go.kr

³한국어로 작성된 2016년 6월 보고서는 “마스터 플랜”으로 칭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종합자체평가는 “정보공개 민간 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이라 칭하고 있다. 이후, IRM보고서 초안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세 번째 이름인: “정보공개 개방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라 칭했다.

⁴“전자정부: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정충식, 경성대학교. 2016. 12. 대한민국행정학회., 25-26.

⁵“전자정부: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정충식, 경성대학교. 2016. 12. 대한민국행정학회., 39.

⁶“전자정부: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정충식, 경성대학교. 2016. 12. 대한민국행정학회., 39.

정부 자체평가보고서 (한국어 버전)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3 년 7 월 “기업 및 사회 복지를 위한 공공 데이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도입하였으며, 이 포럼은 1년에 2차례 개최되며 300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존의 오픈데이터 포럼은 오픈데이터에 관여하는 선택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OGP 공약 논의 여부, 이해관계자 참석 여부 및 협의내용 공개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행 과정에서 오픈데이터 공약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기업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시민 사회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오픈데이터 포럼의 역할은 IAP2 스펙트럼에서 “공공데이터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기준을 충족시키나 완전한 협의로 간주 할 수는 없습니다.

ODSC 및 포럼 외에도, 정부는 이행 기간 동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공약 3e (민간부문 공공데이터 사용 장려)에 관한 피드백을 수렴했습니다⁷. 공청회는 질의 응답 세션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에 관한 보고는 없습니다. 2015 년 정부 3.0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진행된 피드백 설문 조사는 4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3 개의 질문만 제시되었습니다: (1) 정부 3.0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 그렇다면 정부 3.0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3) 정부 3.0은 시민의 행복과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정 서비스 개혁입니다. 정부 3.0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질문의 성격에 따라, IAP2의 협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분석, 대안 및 / 또는 결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할”수 없었습니다⁹. 일부 협의는 특정 공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안전처(MPSS)은 2016 년 시민들의 오픈데이터 관련 희망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후 “오픈데이터 수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 조사는 공공 협의의 긍정적인 사례이나, 한 가지 공약과 관련된 좁은 범위의 피드백만을 수렴한 것입니다. 행동 계획의 전반적인 이행을 위한 시민 사회와의 협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표 2: 행동계획 협의과정

행동계획 단계	OGP 프로세스 요건 (지배구조 관련 조항)	정부는 해당요건을 충족 시켰는가
정부는 해당요건을 충족 시켰는가	이행 기간 중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이 진행되었는가?	아니오
	협의: 공개적이거나 또는 초청자 위주인가?	초청자 위주
	IAP2 스펙트럼에 관한 협의 ¹⁰	고지

⁷정보공개 공청회 <http://onoffmix.com/event/40686>

⁸정보공개 회담: <http://onoffmix.com/event/68448>

⁹정보공개 의견조사: <https://goo.gl/Har3zZ>

¹⁰정보공개 의견조사: <https://goo.gl/Har3zZ>

⁹IAP2 스펙트럼: https://c.ymcdn.com/sites/www.iap2.org/resource/resmgr/files/iap-006_brochure_a3_internat.pdf

¹⁰공공참여를 위한 국제협회, 정책 참여IAP2 스펙트럼, http://www.iap2.org/resource/resmgr/Foundations_Course/IAP2_P2_Spectrum.pdf.

공약이행 상의 진전

OGP의 일환으로, 각국은 2 개년 행동계획 하에 공약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종 자체평가보고서는 ‘그것이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라는 추가 측정 항목을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는 해당 최종의 이행 수준과 이 측정 항목의 진행 상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미 완결된 공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라는 측정항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완료된 공약 관련 추가 정보는 대한민국 IRM 중간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계획은 공공 서비스 개선, 공공청렴도 향상 및 공공 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세 가지 마일스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RM 연구에 사용된 모든 지표와 방법은 IRM 절차 매뉴얼 (<http://www.opengovpartnership.org/about/about-irm>)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OGP 참여국들 사이의 경쟁을 장려하는 유용성 차원에서 ‘별표 표시된 공약(★)’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별표 표시된 공약은 모범적인 OGP 공약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별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잠재적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별표 표시된 공약은 ‘중간정도’ 또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공약에 사용된 언어는 열린 정부와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접근, 시민 참여 또는 공적 책임이라는 OGP의 가치 중 적어도 하나와는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약은 완전하게 이행될 경우, ‘변혁적인’ 잠재적 영향을 불러와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공약은 행동계획 이행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 또는 ‘완전한 수준’의 이행정도를 인정 받으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간 보고가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행동계획에는 별표 표시된 공약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 보고서에서 별표로 평가된 공약이 행동계획 이행 주기 말에, 상당한 또는 완전하게 이행되지 못하여 기간 만료시 전반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여된 별표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의 그래프는 IRM이 진행 보고 프로세스 과정에서 수집하는 많은 데이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데이터 세트 정보는 www.opengovpartnership.org/explorer 의 OGP Explorer를 참조하십시오.

“정부의 개방성에 대한 기여?” 여부

종종 OGP 공약은 모호한 말로 표현되거나 열린 정부와의 분명한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요한 정치적 개혁을 달성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상당한 진전을 이룬 공약이 적절하고 야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부를 개방하는데는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부분을 이해하고자,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정부 관행상의 실제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IRM은 종합 보고서에서 ‘그것이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했습니다. 이 변수는 산출물 측정을 넘어 공약 이행 결과와 정부 관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적 영향을 설명하는 IRM의 “별표 표시된 공약”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IRM 연구원은 해당 공약과 관련된 OGP 가치와 관련하여 “그것이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라는 사실을 평가합니다. 평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확장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악화됨: 공약 측정결과 정부 개방성이 악화되었다.
- 변화없음: 정부관행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 미미한 변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개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만 소소한 변화가 있었다.
- 상당한 변화: 관련 정책분야에서 정부개방성에 발전이 있었으나, 그 범위나 정도는 제한적이다.
- 놀라운 변화: 열린정부에 의해 관련 정책분야에서 ‘일상적인 업무’가 바뀌는 개혁이 있었다.

이 변수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원은 행동계획의 시작 단계에서 현 상황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행에 따른 정부 개방성 변화 결과를 평가합니다.

독자는 한계가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IRM 최종자체평가보고서는 이행 주기가 완료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 변수는 2 년의 이행기간이 끝날 즈음의 정부 개방성 관행과 관련하여 관찰이 가능한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및 변수는 복잡한 방법론적 영향과 보고서의 시간적 프레임으로 인해 영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표 3. 개요: 공약별 진전 평가

공약 개요	공약 개요				OGP 가치와의 관련성(명시)				잠재적 영향				완료		중간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는가?				
															최종						
	이행 영역	이행 구분	진전 중간	이행 구분	정책/제도 변경	시민참여	공적 책임	투명성 및 책임을 위한 기술혁신	영향 없음	미미함	다소	변형적	미확수	제한적	상당한	완료	악화	보통 이행	미미함	상당한	양호 이행
1a. 민-관 협치 강화		X			X	X	X		X					X		X			X		
1b. 맞춤형 서비스 제공		X					X		X					X		X		X			
2c. 정보공개 고 도화			X		X	X	X			X				X		X			X		
2d. 공공 서비스 윤리강화			X		X	X	X		X				X						X		
3.e 공공데이터 민 간활용 활성화			X			X	X			X					X	X			X		

1 | 공공 서비스 개선

1a. 민-관 협치 강화

공약 본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채널에는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시민 배심원이 포함되며, 온라인 채널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정책에 대한 웹 토론 및 모바일 앱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민-관 협치의 모범 사례를 여러 단계의 정부 기관에 발표하고, 2015년까지 지방 정부의 국민신문고 웹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토론 플랫폼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관협력은 정책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대중이 참여한 정책 입안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양적인 목표 설정 보다는 보다 폭 넓은 이해관계자의 토론 참여 및 다양한 정부 기관과의 모범 사례 공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온라인 토론 일정을 조정하고, 모든 시민 또는 시민 단체가 해당 온라인 정책 토론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요약정리: 해당 공약에서 4개의 마일스톤을 도출해 냈습니다:

1. 민-관 협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인 '오프라인 채널'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정책에 대한 웹 토론,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온라인 채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 다양한 정부 기관에 대한 민-관 협치에 관한 강력한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3. 2015년까지 지방 정부의 "국민신문고" 웹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토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4. 주요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온라인 토론 일정을 계획하면서 개인이나 CSO가 초대 없이 참여하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책임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

공약 개요	공약 개요				OGP 가치와의 관련성(명시)				잠재적 영향				완료		중간 최종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는가?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간접	이해당사자	국민신문고	시민참여	국민참여	국민참여 및 책임을 위한 기술혁신	이해당사자	미미함	다소	변형적	미확수	제한적	상당한	완전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1a. 민-관협치 강화		X			X	X		X	X					X		X				X	
1a.1. 협의채널 구축		X				X			X					X		X					
1a.2. 민-관 협치 사례	X				명확하지 않음				X					X							
1a.3. 온라인 토론 플랫폼		X				X		X	X					X		X					
1a.4.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온라인 토론		X			X	X		X	X					X		X					

공약 목표

해당 공약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포럼 회의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에 의하면, 해당 공약은 공무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참여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을 채택할 당시, 정부는 국민신문고 웹 사이트 및 민원 24를 통해 정보, 데이터 및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당 공약에 따라:

1.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시민 배심원”제를 설립할 것입니다.
2. 국민신문고(e-People)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공약 문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정책이나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정부의 불법 활동 또는 인권 침해에 대한 혐의 사실을 보고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책 토론 및 논의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상태

중간 검토: 제한적 수준

이 공약을 위한 4 개의 마일스톤에 관한 정보 부족, 모호한 표현, 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부족으로 인해, 중간 보고서에서 완료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검토 기간 동안 협의를 위해 국민신문고(e-People)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기존 양식이 공약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완료수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공약은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국민신문고” 웹 사이트를 확장하여 더 많은 양방향 토론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와 같은 과거의 성과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약은 야심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전의 관행을 크게 개선하지도 못했습니다.¹

최종: 상당한 수준

대한민국 정부는 2016 년 6 월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보고서와 2016 년 9 월 자체평가보고서 등 이행과정을 기록한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9 월의 종합자체평가에 따르면, 행동 계획의 수립 및 이행기간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도구를 통한 민-관 협치의 개선 사례와 시민들과의 온라인 정책 토론 확대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일부 CSO는 설명된 활동들이 진정한 시민 참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명 드렸듯이, 이 공약의 마일스톤은 측정을 위한 측정 가능한 요건 및 측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상당히 또는 완전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열린 정부 도구를 사용하여 현재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마일스톤 1. a. 1. 협의채널 구축 (상당한 수준)

2016 년 6 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을 위한 별도의 협의를 포함한 “오프라인 채널”을 이행할 기관으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KNAT)를 지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직한 이 단체는 2014 년 9 월 3 일 발족되었으며, 이듬해에는 43개 “상장사 및 시민단체”와 함께 “윤리적 로비 문화” 및 부패방지 캠페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정부는 2014 년 5 월부터 시민들의 “정책 토론 참여”를 가능하게 한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15 년에는 “가상 공청회, 정책 토론 및 여론조사”를 통해, 총 3,870 건의 정부 및 민간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². 공약 내용에는 시민들의 견해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일스톤은 수행된 활동을 토대로 상당히 완료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마일스톤 1. a. 2. 민-관협치 사례 제공 (상당한 수준)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는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고 민-관 협치 사례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4년에 시작된 시민, 서비스 설계자,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정부3.0 설계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버려진 주택을 개조하여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을 고안한 인천 팀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에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여 248개의 “정책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해당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공공 서비스 설계”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³. 이 마일스톤은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완료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성공적인 협력에 대한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측정 기준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일스톤 1. a. 3. 온라인 토론 플랫폼 (상당한 수준)

정부 자체평가보고서는 e-공청회 및 의견 조사와 같은 도구를 통해 국민신문고(e-People) 민원 서비스의 지속성과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부는 비록 야심차거나 판도를 뒤집는 혁신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신문고 사용 통계를 포함한 국민 인권 및 이익에 관한 백서⁴를 작성하고, 국민신문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 및 플랫폼 변경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일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취급 건수는 1,900,000건에서 2,500,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정부는 2016년부터 시민들이 단일한 중앙 시스템을 통해 지방 정부 업무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국민신문고 통합운영 체계’ (“E-People Comprehensive System”)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현재, 54개 지역 정부가 이 시스템에 가입했습니다.
- 보고서는 시민들이 여론조사나 온라인 토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책 입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국민신문고 “정책/이슈 참여 시스템” (국민 신문고 정책 참여)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약간의 사용 증가를 보여주는 차트가 자체평가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정부는 자체평가에서 사례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론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OGP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자체평가보고서는 행정자치부가 시민이 정책에 관한 일방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친화적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신문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안이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는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대해 무작위로 선택된 세 가지 정책 토론을 감사한 결과, 정부 기관이 양 방향 토론 없이 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의견 제시 대부분이 무용지물인 정책을 홍보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⁵. 행정자치부가 시민과 의견을 공유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많지만, 진정한 논쟁이 진행되었거나 또는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설명했듯이, 해당 공약은 정부가 국민신문고 플랫폼을 유지하고 업데이트 하는 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시민 사회 이해관계자가 공약의 마일스톤을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어 의구심을 표명했다는 사실⁶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시민과 정책 입안자 간의 양방향 협력을 증진하려는 공약 정신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플랫폼 업데이트를 정책 토론을 위한 새롭거나 개선된 도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일스톤 1. a. 4.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온라인 토론 (제한적 수준)

마일스톤의 완료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는, 정부가 공약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수집하는 행위와 시민들이 국가 프로젝트 정책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이에 검증가능한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체평가보고서는 “2015년에는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방지 (4월)’ 및 ‘효과적인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 (7월)’⁸ 등이 주목할 만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논쟁 결과를 분석한 후 정책 입안을 위해 관련 정부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탈세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608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조사가 실시되었고, 7,216명의 시민들은 부패방지법에 관한 설문문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관계 당국을 위해 집계는 되었으나, 그것이 시민의 직접적인 의견 반영 결과로 특정 정책의 변경을 초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 웹 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4월의 조세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2017년 5월 1일 현재 여전히 국세청에서 “검토 중”입니다⁹. 또한, 김영란법은 설문

조사가 완료될 시점에는 이미 통과가 된 상태였습니다. 부패방지법 개발에 관한 신문고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의 견해가 정부 정책에 반영은 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¹⁰. IRM이 시민들이 정책 결과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마일스톤은 제한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 자체평가보고서는 각 부서가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연차 정부 성과평가에는 각 부서 및 기관이 온라인 토론 및 여론 조사 결과가 정책 결과에 어떻게 기여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평가보고서는 시민들의 피드백이 특정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방법을 보여주는 증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정보접근성: 미미한

시민참여: 미미한

개별적으로 및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시민 사회 단체 및 학계는 일반적으로 이 공약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공약으로 인해 열린 정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 어떠한 제안이 포럼개최 및 모바일 앱기반 토론추진코 이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¹¹. 국민신문고 등 기존 플랫폼이 해당 공약을 통해 향상되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개선사항은 시민 참여 및 정보 접근과는 명확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정부의 개방성 달성 및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¹².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의 수와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다소 진전을 보였으나,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동안 수행한 활동들은 이해관계자가 주요한 방식으로 정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민 참여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변화는 미미합니다.

이 공약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책 토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잠재적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정부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국민신문고 정책 토론에 대한 샘플 감사 결과는 해당 공약으로 인해 시민들이 특정 정책 변화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부 협의 그룹과 민간 부문 협력이 공약의 첫 번째 두 가지 마일스톤을 달성한 것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전 행정자치부 정보 고문인 정충식 교수는 공약의 이행을 “민간 부문과의 협조가 거의 없이 정부가 주도한 일방적인 노력”으로 보았고, 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결여된” “단순한 받아쓰기 대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부 3.0 설계 그룹의 경우, 정부는 “일상적인 주거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OGP가치1과 관련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 행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행동계획 전부터 민원24 및 국민신문고와 같은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고, 해당 공약이 시민 참여를 향상시킨 이러한 도구의 변화를 가져 왔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¹³. 시민 참여로 인해 완전하게 완료되고 개선된 정책 및 프로젝트 사례는 거의 없으며, “vote-in” 웹 서비스가 진정한 대중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이해관계자 및 연구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협력에 대한 문서화되고 검증 가능한 사례들은 협치라는 가치보다는 주로 주거 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7,081 명의 시민들이 주거 단지에서의 간접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조사 및 온라인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2017 년 말¹⁴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영한 주택관리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백서에 인용된 다른 사례에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한 도서관 자리¹⁵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의 사용, “유기농 화장품 인증시스템¹⁶” 설계를 위한 토론 포럼 및 “혼란스러운 버스 정류장 및 역 이름”을 바꾸기 위한 포럼 등 다수의 미완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약 300건의 피드백이 온라인으로 제출되었고, 대전시가 버스 정류장의 이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에 따라 분리시킨 도서관 자리 및 화장품 기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권고안을 제출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행동계획 이행 기간 종료¹⁷ 후인 2017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약이 시민들이 정책 및 서비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론 조사 및 설문조사들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월 여부?

이 공약은 세번 째 행동계획으로 이월되었으며, 공약 3a에 포함된 활동들은 정부 서비스 설계를 위한 시민 단체의 운영 촉진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제안과 피드백이 어떻게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부 기관은 국민신문고 웹 사이트에 제기된 특정 민원 검토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연락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연락하여 공약에 관한 양방향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인사명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명부 대부분은 어떤 공무원이 어느 민원을 처리하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¹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탄원서 제출 방법," e-People.go.kr (영어), http://www.epeople.go.kr/jsp/user/on/eng/HowPetition_USA.jsp.

²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자세평가보고서," (번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lf-Assessment Report), 2016년 6월, pp. 5-12.

³ 행정자치부. "시민참여" 정부 3.0 설계그룹"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그룹," 2016년 2월 29일, https://mogaha.go.kr/eng/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cTPNk1j810FLRnV4IZ4DK5zcFDYtYaWzgM7Y48FM7Lv8eQPagzaRrBjFUpWq8iNe.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19&nttId=48519. 공식정보 <http://ifworlddesignguide.com/entry/180925-gov-30-design-group>.

⁴ "행정자치부. "시민권리 및 이익에 관한 백서" 2016년, p.10. <http://info.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102020101&boardNum=63254>

⁵ 예: 통계청 설문조사 "국민"이라는 말을 들을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70406-00007>

시민/정부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한 행정자치부 논의 조사: <http://idea.epeople.go.kr/idea/pollView.do?ideaCd=170331-00003&ideaImproveSeq=0000000001>

특히 및 상표정책에 관한 통계청 조사: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61123-00008>

⁶ 정충식 경성대학교 행정학교수 겸 전 행정자치부 자문은 정부의 공약설명이 일반대중과의 협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2016년 12월 논문에 정부 3.0의 단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부 3.0 기간 동안, 정부는 시민 자문단을 조수처럼 대했고,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⁷ 조세회피/차명계좌 법안에 대한 정부 여론조사를 주도한 다음 아고라 온라인 논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list?bbsId=C001&issueArticleId=438&issueBbsId=I001>

⁸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다음 아고라 메시지보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issue/read?bbsId=I001&articleId=440>

⁹ 여론조사 결과는: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suve/UPoSurveyView.jsp?txtSurNo=1AC-1507-001710> 를 참조하십시오.

¹⁰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View.jsp?app_no_c=1AC-1503-011373

¹¹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View.jsp?app_no_c=1AC-1507-012735

¹²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 서울 IRM 이해관계자 포럼. 포럼의 정서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해관계자와 주고받은 이 메일 서신 및 회의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오픈넷, 국제투명성기구, 인디랩.

¹³ Ibid

¹⁴ Ibid

¹⁵ 행정자치부 2017년 4월 11일자 서신.

¹⁶ E-people discussion on Library Seating Policy: http://idea.epeople.go.kr/idea/ideaThinkResult.do?idea_cd=160328-00019&seq=0000000001

¹⁷ 유기능 화장품 규정에 관한 국민신문고 토론: http://idea.epeople.go.kr/idea/ideaThinkResult.do?idea_cd=160517-00003&seq=0000000001

¹⁸ 행정자치부, 2017년 4월 11일 증거문서. 문서는 IRM연구원이 보관중이다.

1. 공공 서비스 개선

1b.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약 본문:

대한민국 정부는 대중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일반 서비스 (공공 안전 등), 대상 그룹별 서비스 (산모/신생아, 초등/중등 학생, 대학생/구직자, 노인), 취약 집단 (장애인, 농촌 주민 및 기타 소외 계층) 서비스 및 산업별 서비스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기타 일반 사업) 등 4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시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를 위해 50 개의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 참여를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전국 조사 및 공공 서비스 설계를 위한 민관 태스크 포스는 선별된 서비스 프로젝트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15년에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시민 사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차례의 협의 및 워크숍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요약정리: 해당 공약에서 3개의 마일스톤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1. 2014년까지, “시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를 위해 50 개의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2015 년까지, 국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입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협의 및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책임기관: 행정자치부(MOI)

지원기관: 2016년 6월 정부의 IRM 브리핑에 따른 다수 부처 및 정부기관

공약 개요	공약 개요				OGP 가치와의 관련성(명시)				잠재적 영향				완료		중간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는가?
	이민	이민	간	이민	정	시민참여	국민 책임	투명성 및 책임을 위한 기술&혁신	이민	미미함	다소	변화적	미완	제한적	상당한	완전	
1b. 맞춤형 서비스 제공		X				X				X				X			X
1b.1. 50개 대표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			X			X				X				X			
1b.2. 대표 프로젝트 개발		X				X				X			X		X		
1b.3. 새로운 공공 서비스		X				X				X				X			

공약 목표

이 공약은 행정자치부가 공적 책임에 대한 OGP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취약계층,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 50 개의 “국가 서비스 상품”이라 칭한 것들을 선정 및 개발하기 위한 협의 및 워크숍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채택될 당시 정부는 이미 강력한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성공을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당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50 개의 국가적 상품을 선정합니다.*
2. *이행 기간 동안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워크숍, 포럼 및 태스크 포스를 구성합니다.*
3. *2015년까지 국민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대표 상품을 확장해 나갑니다.*

상태

중간 검토: 제한적 수준

행동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연구 기간 이전에 많은 공공 서비스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공공 안전과 같은 일반 서비스, 신생아를 둔 산모, 학생, 구직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상 그룹별 서비스, 장애인, 농촌 주민, 소외 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위한 산업별 서비스 등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간 보고 시점에는 이 공약이 제한적인 진전만을 보였습니다. 이행 기간 초반에, 정부는 50 개의 국가 프로젝트 중 20 개를 선정하여 온라인 (1. b. 1)에 게시했습니다. 이 활동의 완료는 대표 프로젝트의 절반 미만이 선정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프로젝트 (1. b. 2) 개발은 제 때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및 워크숍 결과 (1. b. 3)를 토대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은 제한적으로만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온라인 게시판, 구글 및 네이버(한국어로)를 검색해도 2014년도 공공계획이나 민-관 협치 회의록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자체평가는 전체 이행 상태를 제대로 조명해 주지 못했습니다¹.

최종: 상당한 수준

1. b. 1. 50개 대표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 (완료)

행정자치부가 2016 년 6 월 작성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4 년에 50 개의 국가적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공개적인 사실 조사 및 미디어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이행 기간 내내 진전을 보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50 개의 국가 프로젝트 목록² 을 제공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목록의 정확성에 동의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행 기간 내내 제약, 통신, 범죄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공공 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여러 부처에 의해 진행되며, 정교한 수준의 부처 간 협력과 소통³ 을 필요로 합니다.

1. b. 2. 국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국가 프로젝트 개발 (상당한 수준)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맞춤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행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 간에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시민과 관련된 활동들은 주로 정보 공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약 본문은 공공의 필요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 넷 코리아 (OpenNet Korea) 같은 열린 정부 중심의 이해관계자들은 초기에는 이행 기간 동안 공공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의를 주최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⁴. 그러나, 이 이해관계자들은 2016 년 6 월 정부와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행정자치부가 정보 공유 정책을 장려하기위한 시민 참여 공약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 b. 3. 여러 차례의 협의 및 워크숍을 통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 개발 (상당한 수준)

정부가 공공 서비스 설계와 관련하여 공개 토론을 진행해 왔으나, 모든 토론이 개방적이고 시민을 참여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 프로젝트 중 40개는 민간인, 임산부, 지역 주민, 3 명의 교수 패널⁵ 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한 협의를 통해 이행되었습니다. IRM 연구원은 2016 년 6 월과 12월에 신원이 밝혀진 3명의 교수 패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프로젝트 수행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수행된 일련의 워크숍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지만 날짜나 주관 기관 이외의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9월 21일 제일병원 미래맘 가임보존센터가 주최한 임산부 워크숍). 회의 의제, 참가자 명단, 회의록, 토론 결과 등은 기록 또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많은 의견과 온라인 문서 진행을 포함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공약의 이행은 50 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증거에 근거하여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시민참여: 변화없음

국가 프로젝트는 정부의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IRM 연구원은 협의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 참여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행동계획 이행 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이해관계자들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2016 년 6 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주요 결정은 3 명의 학술 전문가 패널이 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보였던 관행입니다. 정부는 해당 패널이 주도한 의사결정 과정에 민원 및 언론 보도를 포함시켰다고 했으나, 이러한 활동이 시민 참여를 어떻게 개선 시켰는지 또는 과거 관행을 변화시켰는지 여부는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진행 한 협의에 관한 회의록이나, 참가자 명단, 비디오 및 요약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민 참여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비록 2016 년 6 월 보고서⁶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대중의 참여를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월 여부?

이 공약은 세 번째 행동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공약 1a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사회 주체 및 독립적인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¹열린정부파트너십. “대한민국 2014-2015 IRM 진행 보고서,” pp. 19-23.

²2016년 9월 정부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된 50개 대표 프로젝트 목록,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종합_자체평가보고서_2014-2016.pdf.

³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자체평가보고서,” (번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lf-Assessment Report), June 2016, pp. 13-19.

⁴고려대 교수 겸 오픈넷 코리아 관계자인 박경신 교수와의 2016년 9월 13일자 서신.

⁵3명의 교수는 협의워크숍 날짜와 함께 자체평가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다. (인하대학교 김영성 교수(2014년 2월 27일), 충북대학교 김상욱교수 (2014년 6월 13일), 연세대학교 이원석교수 (2014년 6월 27일))

⁶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자체평가보고서,” (번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lf-Assessment Report), June 2016, pp. 15-19.

II. 공공 청렴도 향상

2c. 정보공개 고도화

공약 본문:

2014 년 3 월 말 이후 장관급 이상이 서명한 정부 문서는 공개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되어 왔습니다.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 업로드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정보(8개 항목)가 포함된 문서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5 월 말에는 약 8 만 건의 원문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공개대상 문서의 범위는 2015 년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장이 서명한 문서도 공개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1 억 건의 문서가 공개 될 예정입니다.

공유한 정보가 시민 사회의 요구를 충족 시키도록 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2014 년 6 월 말까지 정보공개 과정을 감독하는 시민 감시 단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감시단체는 시민 사회 구성원, 전문가 및 기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감시단체 구성원은 오픈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오픈데이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뽑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중앙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에서 오픈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검토하고, 직접 오픈데이터를 요청한 후 각 기관의 실적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2014 년에 달성해야할 또 다른 목표는 공개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우선 관심이 가장 높은 10 개의 특정 분야 (건강, 복지, 식품 안전, 육아, 금융, 교육, 소비자 보호, 여가, 일자리 및 주택)의 공개 정보 목록을 미리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약정리: 해당 공약에서 3개의 마일스톤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1. 2015년 공개 예정 문서의 수를 확대하여 매년 1억 건의 문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시민 감시단체가 정보공개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3. 10개의 “관심 분야”의 공개 데이터 목록을 발표한 후 2014년 까지 공개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책임 기관: 행정자치부

공약 개요	공약 개요				OGP 가치와의 관련성(명시)				잠재적 영향				완료		중간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는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국민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국회	타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미디어	다수	전문가	미확정	확정	중간	최종	
2.c. 정보공개 고도화			X		X	X	X				X			X			X
2.c.1. 공개된 문서 수 확대			X		X						X			X			
2.c.2. 시민감시단체 구성		X			X	X	X		X					X			
2.c.3. 공개예정 데이터 목록 발표		X			X				X					X		X	

공약 목표

이 공약은 매년 공개되는 문서의 수 (마일스톤 2. c. 1)를 확대하고, 정보공개를 감독하는 시민 감시단체 (마일스톤 2.c.2)를 구성하며, 공개된 정보의 질(마일스톤 2.c.3)을 개선하여, 정보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약 시작 당시, 정부는 이미 2013 년 10 월 정보공개법을 통과시킨 상태였으며, 이론 인해 정보자유법(FOIA) 요청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장관이 서명한 문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공개규칙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공약은

1. 건강, 식품 안전 및 교육과 같은 10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마일스톤 2. c. 1 및 2.c.3) 정부의 공개 범위 및 질을 확대하고,
2. 시민 사회 감시 단체 설립을 통해 공개 과정에 대한 시민의 감독을 강화 (마일스톤 2. c. 2)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주: “정보공개”와 “데이터 공개”는 약간 다릅니다. 정부에 의하면, 정보공개 규정은 정보를 “공공 기관이 공무를 위해 작성 또는 취득하고 관리하는 문서”로 규정한 정보자유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². 데이터는 공공 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문서 또는 정보”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2013)’은 오픈데이터를 “법률이 지정한 목적을 위해 공공 기관이 생산 또는 획득하고 관리하는, 또는 행정 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전자적 또는 사진방식으로 처리된 디지털화된 파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³. 정부가 정부 문서 공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 2c를 그리고 데이터 공유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 3e를 계획하였지만, 이러한 공약은 설명했듯이 분명하지 않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문서를 문서를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접근하도록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중간 검토: 제한적 수준

2013 년 6 월 정부 3.0 정책을 발표하고 2013년 10 월 정보공개법을 통과시킨 후, 정부는 정보공개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민감하지 않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박근혜정부의 결정은 환영할 만합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원문 정보를 60 %까지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의 양 (2. c. 1.)적 확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매년 1 억 건을 공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오픈 넷 (OpenNet) 등의 이해관계자는이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방 정부 데이터 세트 및 도 정부 데이터 세트를 국가 데이터 세트와는 별개로 공개하였으나, 모두가 비슷한 내용이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한 번 이상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약 3e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15 년 6 월 현재, 정부는 50 명의 시민이 시민 감시 단체 (2. c. 2) 구성원으로 선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또는 이 단체가 정보공개를 어떻게 감독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IRM 연구원은 10개의 기획분야 (마일스톤 2. c. 3) 에서 공개될 정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한국어로든 또는 영어로든 어디서든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³.

최종: 제한적 수준

2. c. 1 공개된 문서 수 확대 (제한적 수준)

정부가 보고한 목표와 벤치마크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약의 완료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 및 정부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정부의 투명성 개선에 동의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공개된 데이터 세트가 포함된 문서 건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행정자치부는 2016 년 6 월까지 9백 7십 1만 건의 문서가 공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 년 6 월, 행정자치부는 또한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등 개인오픈데이터에 대한 내부 패널의 우려로 인해, 당초 1억 건의 원문 정보 공개라는 목표를 1천만 건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 정보, 사업 비밀, 외교 및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 문서가 자동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가 서명한 정책 결정과 관련된 문서를 중심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픈넷 코리아(Open Net Korea) 정책실장 겸 고려 대학교 교수⁴ 인 박경신 교수는 행정자치부가 중복을 없애고 개별 데이터 세트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기 보다는 각 행정 구역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데이터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100개 지역에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경신 교수는 전국적으로

공개된 고유한 데이터 세트는 실제로 100 개가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보고한 19,500 개의 데이터 파일은 (2017년 2월) 사실은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험실 연구를 바탕으로, IRM 연구원은 대부분의 데이터 세트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고, 데이터 세트가 지방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행 기간 동안 공개 예정인 문서 수를 1천만 개로 낮추겠다는 결정은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지만, 공개된 고유 정보의 실제 양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해당 마일스톤은 “제한적”으로만 완료되었습니다.

2. c. 2 시민감시단체 구성 (명확하지 않음)

마일스톤 2. c. 2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는 중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오픈데이터 포털 (data.go.kr)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집된 민간인 50 명으로 구성된 “오픈데이터 시민 감시팀”이라는 시민 감시단체⁵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행 기간 동안, IRM 연구원은 계속해서 감시 단체 구성원을 찾아내려 하였으나 참가자의 이름을 확인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자체평가보고서에서 해당 단체를 “오픈데이터 시민 감시자 (IDCI)”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으며,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9일⁶까지 행정자치부 웹 게시를 통해 41명의 시민, 활동가 및 학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자체평가보고서 및 29페이지짜리 2016년 6월 행정자치부 보고서 모두 한국어로 해당 단체를 “오픈데이터 국민 모니터단” (“Open Data Civilian Monitoring Team”)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해 두어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부 자체평가보고서는 “기관들이 공개될 정보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분류 및 목록화 하거나 공개된 정보의 검색 및 탐색을 가능하게 하지 못하였고, 일반 대중에게 주요 관심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공개된 정보에는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IDCI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정부가 온라인 감시 단체의 참가자를 모집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참가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의 감시활동, 회의 기록 및 제기된 사안에 대한 정기적인 문서화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마일스톤은 제한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c.3 공개예정 데이터 목록 발표 (완료)

정부는 우선순위를 매기고 공개될 데이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카테고리는 대한민국 정부 데이터 포털 data.go.kr 에 게시되어 있으며, 고용, 복지, 주택, 건강, 오락, 안전, 여성 개발, 금융 행정, 창조 경제, 및 규제 개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정보접근성: 미미한

시민참여: 변화없음

공정책임: 변화없음

국가 행동계획 전에는 특히, 한국인들이 “공안정치”라 부르던 관행으로 유명하던 또는 국가안보정책을 가장 우선시하여 투명성 및 시민참여 권리⁷를 희생시키면서 반공 구호를 외쳐대던 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2013년) 집권하에서는 정보접근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행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들은 시민 참여 부분에서⁸이 공약이 가지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활동 검증 등 시민 감시 단체의 정보, 세부 사항 및 성과가 불분명 했기 때문에 공적 책임과 시민 참여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접근성 관련 공약 초기에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행과 함께, 오픈넷 코리아(Open Net Korea)는 공개된 새로운 데이터의 양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정보공개 성공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⁹. 그러나, 정부는 연구 기간 동안 발표된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이전 데이터 관행을 바꾸는 데 있어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어느 정도는 정보공개법 (2013)과 data.go.kr 웹 사이트를 통한 이행 덕분입니다. IRM 연구원은 2016년 9월 현재 공공 서비스 등 정부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문서 공개 및 오픈데이터를 통해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율적이라는 데 이해관계자와 생각을 같이하였습니다.

영남대 황성수 교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오픈데이터 프로젝트는 2013년 10월 정보공개법안이 통과된 이후, 긍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¹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설문원 교수에 따르면, “사전고지를 통한 공개정보량의 인상적인 증가”-자체평가에서 “주제/유형별 사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언급된 종류는-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설교수는 “공개된 정보의 질은 퇴보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개는 “매우 일방적이어서 공공의 이해를 위한 서비스 정신 보다는 제공자의 통계 및 외부 성과 지표를 위해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개될 정보를 검토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방대한 양의 업로드된 문서, 특히 정기적인 허가 문서를 정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부족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¹¹. 오픈데이터 포털의 품질 관리 부족은 특정 정보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인 제니퍼 강 (Jennifer Kang)은 업로드된 데이터의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치 있는 실질적 정책 문서가 아닌 허가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민국이 허가 문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희망의 조짐이라고 언급했습니다¹².

이해관계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으로 인해 오픈데이터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소중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월 여부?

해당 공약은 공약1a에 따라 세 번째 행동계획으로 이월되었으며,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의 수를 증가 시켰습니다. 기본적인 정부의 오픈데이터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연구원은 공개된 데이터 양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픈데이터전략위원회 제니퍼 강 위원은 정부가 매년 생산되는 모든 문서의 일정 비율을 공개하거나 또는 생산된 문서의 총량 대비 공개된 문서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장 하였습니다. 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 사회의 피드백을 요구하면 향후 이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¹법제처, “데이터공개법,” 201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39&efYd=20160407#0000>

²법제처, “전자정부법,” 행정정보의 정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EC%A0%9C2%EC%A1%B0>

³열린정부파트너십, “대한민국2014-2015 IRM 진행보고서,” pp. 27-31.

⁴2016년 10월 25일 박경신 교수 인터뷰.

⁵행정자치부, 2016년 6월 자체평가보고서 및 2016년 9월 종합자체평가보고서.

⁶IDCI 시민감시단체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정자치부온라인 구인공고: (<http://koreagov30.tistory.com/396>)

⁷Jamie Doucette 및 구세웅, “민주주의 왜곡: 동시대 대한민국 공안정책,” 아시아 퍼시픽 저널, Vol. 11, Issue 48, No. 4, 2013년 12월 2일. <http://apjif.org/2013/11/48/Jamie-Doucette/4042/article.html>

⁸2015년 9월 대한민국 서울 IRM 이해관계자 포럼

⁹오픈넷 코리아 관계자 겸 고려대학교 교수인 박경신 교수와의 2016년 10월 25일자 이 메일.

¹⁰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황성수 부교수와의 2016년 11월 29일자 서신.

¹¹2017년 4월 17일 설문원 인터뷰.

¹²2017년 4월 21일 제니퍼 강 인터뷰.

II. 공공 서비스 개선

2d. 공공 서비스 윤리 강화

공약 본문:

퇴임 공직자가 퇴직 후 공공 부문 외 부문에서 수입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4 년 퇴임 공직자 재제임용 목표율을 9.7 %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강화 방안은 2014년 4월 내에 마련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퇴임 공직자, 공공행정 교수 및 전문가들과 1년에 2회 이상 정기 자문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목표 제한율은 2015 년부터 매년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퇴임 공직자는 퇴직 신고서에 서명하자마자 자산 공개 웹 사이트에서 퇴임 공직자 재임용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공 받게됩니다. 또한, 2014년 하반기부터 윤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 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윤리위원회 웹 사이트에 퇴임 공직자 재임용 조사결과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요약정리: 해당 공약에서 4개의 마일스톤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1. 퇴임 공직자 재임용 계획을 마련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 최소 1년에 2회 정도 퇴임 공직자, 공공행정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자문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3. 3퇴임 공직자의 퇴직 신고서 자산 공개에 관한 지침을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4. 정부 윤리위원회 웹 사이트에 퇴임 공직자 재임용 현황 조사결과를 게시할 것입니다.

책임기관: 인사혁신처

공약 개요	공약 개요				OGP 가치와의 관련성(명시)				잠재적 영향				완료		중간 최종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는가?				
	영향	영향	중간	영향	정교	정교	정교	정교	영향	영향	영향	영향	미완수	제한적	상당한	완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2d. 공공 서비스 윤리 강화			X		X	X	X		X				X								
2.d.1. 계획 구축 및 조사이행			X				X		X				X			X					
2.d.2. 자문그룹 회의 개최			X			X	X		X				X	X							
2.d.3. 자산공개에 관한 온라인 가이드라인			X		X		X		X				X			X					
2.d.4. 윤리조사 온라인 게시			X		X		X		X				X	X							

공약 목표

이 공약의 목표는 공무원의 윤리 및 부패방지 노력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산물인, 특히 정부와 재계 대표들 간의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을 포함하고 있는 선물, 교환 및 이권제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¹. 정보접근성, 시민 참여 및 공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공약을 도입할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놀랍게도 정기적으로 안전, 규제 및 부패와 관련된 스캔들²을 겪고 있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스캔들 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법규정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공약을 통해:

1. 퇴임 공직자 재임용 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 최소 1년에 2회 정도 퇴임 공직자, 공공행정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자문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3. 퇴임 공직자의 퇴직 신고서 자산 공개에 관한 지침을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4. 정부 윤리위원회 웹 사이트에 퇴임 공직자 재임용 현황 조사결과를 게시할 것입니다.

상태

중간 검토: 미착수

중간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OGP IRM 지원부서가 정부에 보낸 메모를 포함하여 IRM 연구원이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스톤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련 웹 사이트에 대한 컴퓨터 조사 및 검사에서도 퇴임 공직자 재임용 제한 이행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일스톤 2. d.1). 연구원은 “자문그룹 회의”에 관한 회의록이나 요약 본 (마일스톤 2. d. 2)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웹 검색을 통해서도 공무원의 자산 공개에 관한 지침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마일스톤 2. d. 3). IRM 연구원은 감사 결과 (마일스톤 2. d. 4)를 게시한 특정 “정부 윤리 웹 사이트”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것이 국가 부패방지위원회 웹 사이트 인지 또는 별도의 웹 사이트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³.

최종: 제한적

2. d. 1 계획구축 및 조사 이행 (상당한 수준)

한국어로 작성된 2016년 6 월 보고서에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12월자 공직자윤리법 (IRM 중간보고서 작성 직후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마일스톤 2. d. 1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은 은퇴 후 3년의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재취업을 할 수 있고, 이해충돌로 인해 금지대상인 고용주 목록이 확대되었으며 (금지대상인 고용주는 2016년 14,214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요건 중 무엇보다도 고위직 공무원에게 취업 경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⁴. 법 자체가 공약의 완료로 간주 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의 결과로 조사가 강화되면 공약 완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검토 기간 동안, 정부는 조사를 강화하고, 2013년 9.3%, 2012년 5%이던 것을 증가시켜 20%에 달하는 공무원의 공직 외 취업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⁵. 이러한 법 개정과 엄격한 시행 덕분에 해당 마일스톤은 “상당히”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 d. 2 자문그룹 회의 개최 (제한적 수준)

2015년 정부는 “윤리적업무자문위원회 (Ethical Work Advisory Committee)”라는 소위원회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패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자체평가보고서는 해당 위원회가 이행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비록 회의 날짜는 온라인에 게시되지만, “회의 상세내용 및 절차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⁶. 정부는 또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개최된 회의 제목과 날짜 (웹 사이트에 게시 되었습니다)에 대한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회의가 이해관계자들이 모니터링이나 또는 윤리 준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보고서, 인터뷰 및 웹 검색을 통해 행동계획 이행 과정 동안 2016년에 공약을 준수하여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회의록이나 참가자 명단, 요약본 또는 결과물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마일스톤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완료되었다고 간주합니다.

2. d. 3 자산공개에 관한 온라인 가이드라인 (상당한 수준)

정부는 윤리 웹 사이트 (gpec.go.kr)에 “공직자 채용업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이행 기간 동안 윤리 규칙에 관한 SMS 알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d. 4 윤리조사 온라인 게시 (제한적 수준)

2016년 정부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결과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웹 사이트 www.gpec.go.kr/servlet/GpecServlet 에 게시되었습니다. IRM 연구원은 2016년 6월, 감사 결과가 웹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웹 페이지를 재 방문했을때는 감사 정보를 볼 수 없었습니다. IRM 연구원, 연구 보조원 및 IRM 직원은 감사 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 보고서 작성 당시 (2017년 5 월)에는 모두가 웹 사이트 로드 실패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6월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및 이 마일스톤에서 요구하는 대로 감사 결과가 계속 게시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적 완료로 간주합니다.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정보접근성: 변화없음

시민참여: 미미한

공적 책임: 변화없음

=이행 기간 시작까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민관부문의 담합 및 “회전문”으로 인한 공직 비리를 겪었습니다. 특히, 2013년 여름 원자력 안전관련 비리 및 “4 대강” 인프라 프로젝트⁷의 부패 및 태만이라는 광범위하게 퍼진 비리 등이 그 예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약은 중기적으로 미미한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행법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배구조 관행에 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반부패와 관련하여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이 공약이 가장 적절하고, 제대로 이행되면 공적 책임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⁸. 정부는 원래의 공약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특히, 조사 형식으로 공직자윤리법 변경을 시행 및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공무원에게 SMS 메시지 및 웹 사이트를 통해 공직 이후의 취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⁹. 행정자치부는 2015년 금지대상 고용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후 취업 신청 거부 건수를 20% 또는 538건 중 112건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2014년의 19.6% 또는 260명 중 51명에서 약간 개선된 것이지만 해당 비율이 5%에서 10% 사이이던 2013년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초기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즈음에는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 및 연구원이 이 공약과 그 이행으로 공적 책임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 중 하나에 연루되어 수사 및 국회 청문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대통령의 뒷거래는 이행 기간 내내 있어왔습니다. 그 정치적 영향 및 부패 혐의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간 동안에는 거의 전례가 없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 공약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포기했고, 국가 상황으로 인해 한 때 가지고 있던 잠재력마저 무효로 만들었습니다¹⁰.

이월 여부?

이 공약은 세 번째 행동계획으로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이행 완료를 위해 연구원은 윤리적업무자문위원회 회의록, 기록물 또는 해당 기록물의 요약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반부패 법을 시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가 아닌 반부패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주는 보다 투명성을 유지할 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총리실 및 장관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독립된 정부 기관에 의한 엄격한 조사에 따르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퇴직후 취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¹데이비드 C 강. 2002 년. *정실 자본주의: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부패 및 발전*.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

²주요 스캔들에는 2013년 핵발전소 안전비리, 2013년 4대강 사업비리, 정부안전규정시행부족으로 인해 300명 이상이 희생된 세월호침몰, 2015년 SK최태원 회장에 대한 2번째 사면,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 상위 6대 재계관계자의 사면, 박근혜대통령 탄핵 및 정치적 측근 및 재계 대표에 대한 대규모 부패수사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제투명성 기구 웹사이트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KO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³열린정부파트너십. "대한민국 2014-2015 ORM 진행보고서," pp. 31-34.

⁴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 자체평가보고서" 2016년 6월. 정부는 2015년 10월 영어 및 한국어로 자체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2016년 6월 "자체평가"라는 제목의 별도 한국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후자는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 등 추가 정보도 담고 있다.

⁵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자체평가보고서," (번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lf-Assessment Report), 2016년 6월. pp. 23-25

⁶MPM 웹: <https://goo.gl/16GaU6>

⁷조선일보. "4대강 사업 조사에서 엄청난 비밀거래 밝혀지다" 2013년 7월 11일,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1/2013071101465.html, accessed September 8, 2016

⁸2015년 9월 대한민국 서울 ORM 이해관계자 포럼

⁹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자체평가보고서," (번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lf-Assessment Report), 2016년 6월, pp. 23-25

¹⁰오픈넷 박경신 담당자 및 영남대학교 황성수 교수 간 이메일.

III.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3e.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공약 본문:

“공공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2013-2017)” (오픈데이터 종합 기본계획)은 OGP 공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이며 대한민국 정부 3.0 정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픈데이터 종합계획의 주요 요소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오픈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공개율 16.1%로 겨우 3,395개 유형의 데이터만 공개되었던 2013년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50%의 공개율을 달성하기 위해 총 12,654개 유형의 데이터를 공개 할 계획입니다. 공공 데이터 공개를 위한 관련 마일스톤은 또한 2014년 7,653 개 유형의 데이터 공개 및 36.3%의 공개율, 2015년 10,016개 유형의 데이터 공개 및 47.7 %의 공개율, 및 2016년 12,654개 유형의 데이터 공개 및 60%의 공개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데이터 생태계와 관련하여, 원 스톱 오픈데이터 제공 프레임워크가 오픈데이터 포털을 통해 배포될 것입니다. 또한, 범 정부 및 민간 오픈데이터 생태계 지원 프레임워크도 이행될 것입니다.

주 이행 기관은 오픈데이터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이며, 지원기관은 국가 오픈데이터 포털 (data.go.kr)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보화진흥원 (NIA)입니다...

2014년 4월에 개최된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 2차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서 “공공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이행 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요가 높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504개 유형의 주요 공공 데이터 (특히, 경기도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및 교육부 오픈데이터 사용자 커뮤니티 등과 같이 대부분의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협의/자문 기구 및 사용자 공동체를 통한 기관 평가 및 공공 피드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를 우선 선별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데이터 공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을 위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인들이 포함된 민간 협의체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5월 민간 부문의 약 40여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 데이터 공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16개 전략 분야의 민간 데이터 공유 태스크 포스가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16개 태스크 포스는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의사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스크 포스는 오픈데이터 및 “오픈데이터 생태계 그룹”과 협력하여 공개정보를 사용하는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수석 오픈데이터 담당자가 이끌게 됩니다. 태스크 포스는 오픈데이터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지시를 받게 되고, 민간 부문이 요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민간 부문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예: 격월) 회의 및 컨퍼런스 (적어도 일년에 한 번)를 개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사업을 위해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 (네이버지도), 다음 (다음지도), SK 플래닛 (보안 카메라, 대중 교통 정보 등), 및 솔리데오 시스템 (건물 정보) 등 민간 기업의 공공 자료 이용 모범 사례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요약정리: 해당 공약에서 4개의 마일스톤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읽기 쉽게 공약 본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전문은 행동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까지 12,654개 유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때까지 해당연도 마일스톤을 통해 60%의 “공개율”을 달성하고, “오픈데이터 생태계” 및 “오픈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달성할 것입니다.
2. 민간 협의기구 및 공공 피드백을 통해 확인된 504가지 유형의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수요가 높고 영향력있는 정보의 우선 순위를 확정할 것입니다.
3. 16개 태스크 포스는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의사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오픈데이터 여부에 관한 공공부문의 의견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 회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입니다.
4. 민간 기업의 공공 데이터 사용 우수 사례를 확대할 것입니다.

책임기관: 행정자치부

지원기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약 개요	공약 개요				OGP 가치와의 관련성(명시)				잠재적 영향				완료		중간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는가?				
	영점	영점	중간	영점	정보 접근성	시민 참여	공적 책임	투명성 및 책임을 위한 기술&혁신	없음	미미함	다소	범위적	미흡수	제한적	상당한	완전					
3.e. 민간 부문 공 공 데이터 활용 장려			X		X	X					X				X						
3.e.1. 2016년까지 데이터 공개 확대				X	X						X						X				
3.e.2. 공공 데이 터 우선순위 결정			X		X	X					X						X				
3.e.3. 테스크 포 스와 공개관련 협의			X		X	X					X						X				
3.e.4. 모범사례 확대		X			X						X					X					

공약 목표

이 공약은 2013년 6월에 처음 소개된 정부의 기존 정부 3.0 비전에 해당하며, 2013년 10월 정보공개법을 통해 성문화되었고, 정보접근성, 시민 참여 및 공적 책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공약이 채택될 당시, 정부는 비밀유지 보다는 투명성 원칙을 선호하여 이미 공개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공약을 통해:

1. 2016년까지 12,654개 유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때까지 해당연도 마일스톤을 통해 60%의 “공개율”을 달성하고, “오픈데이터 생태계” 및 “오픈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달성할 것입니다.
2. 민간 협의기구 및 공공 피드백을 통해 확인된 504가지 유형의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수요가 높고 영향력있는 정보의 우선 순위를 확정할 것입니다.
3. 16개 태스크 포스는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의사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오픈데이터 여부에 관한 공공부문의 의견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 회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입니다.
4. 민간 기업의 공공 데이터 사용 우수 사례를 확대할 것입니다.

상태

중간 검토: 상당한 수준

행정자치부는 2013년 말 이후, 이 공약에 명시된 대로 매년 공개되는 데이터 세트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 3.0을 이행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 및 CSO와 함께 오픈데이터 포럼과 같이 기업 및 기술에 유용한 공개를 찾는데 중점을 둔 포럼 및 토론을 개최해 왔습니다. 2016년까지 12,654 개의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기 위한 마일스톤 3. e. 1이 완료되었고, 2015년 11월말 현재 OGP 연락 담당자에 따르면 총 15,894개의 데이터 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마일스톤 (3. e. 2)도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에 정부는 행동계획에서 “데이터 유형”이라고 지칭한 “주요 데이터 세트” 504 건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연락 담당자에 의하면, 개별 기관은 “민간 부문과 협의”하여 504건의 “주요 데이터 세트²”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체평가 및 후속 서신을 통해 판단하건데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데이터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16개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협의”의 폭 및 정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정보 제공 결과, 이해관계자 선정 방법이나 데이터 우선 순위 확인 방법 또는 협의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마일스톤 (3.e.3)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 5월 대한민국 오픈데이터 포럼에서 발족된 16개 특별 태스크 포스는 날씨, 교통, 토지, 식량 및 의약, 농업 및 가축, 문화 관광, 재해 및 안전, 건강 및 복지, 조달, 특허, 해양 및 수산, 법과 정의, 과학 및 기술, 노동 및 고용, 환경 및 ICT³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일스톤 (3. e. 4)은 공공 데이터의 사적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확장시키면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건설 관리⁴에서 민간 부문 모범 사례 및 회계 데이터 모범 사례⁵를 웹사이트에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진전의 증거로 39개의 모범 사례를 공개한 오픈데이터 포털 data.go.kr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웹 사이트는 오픈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⁶ 있는 건강, 기술 및 환경 분야 개선사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완료

최종 완료여부는 중간보고 전까지의 강력한 진전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공약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공개 과정 및 투명성의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3. e. 1 2016년까지 데이터 공개 확대 (완료)

2015년 11월까지 15,894 개의 데이터 세트가 공개되었음을 보여주는 data.go.kr 웹 사이트에 기록된 정보에 의하면 정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2016년까지 16,000 개의 데이터 세트를 공개했습니다⁷ (정부는 당초 2016년까지 12,654 개의 데이터 세트 또는 60 %의 “공개율”을 약속했습니다⁸). 2016년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한 산업 수요 및 사회 경제적 영향”⁹을 가진 11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정보, 지방 정부가 발급한 허가 및 인가, 수도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재난 관리, 국가 공간 및 부동산 거래 등 22 가지 유형의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6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¹⁰. 이 마일스톤의 이행은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초과하였으며, 완료되었습니다.

몇몇 CSO는 국가 데이터 세트에 통합시키지 않고 지방정부 데이터 세트를 지나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즉, 약속한 16,000개의 고유 데이터 세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가 데이터 세트의 양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¹¹.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몇몇 CSO는 지방정부의 데이터 세트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범위 및 양보다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개된 국가 데이터 세트 대비 지방 데이터의 양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¹². 고려 대학교 박경신 교수 또한 지방정부의 데이터 세트가 플랫폼에 밀집되어 있어, 다수의 지방 또는 중복된 세트에서 유용한 데이터세트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일스톤 3. e. 2 및 3. e. 3는 중간보고 단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¹³

3. e. 4 모범사례 확대 (완료)

2016년 6월 보고서에서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정부 또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수많은 모바일 앱에 대해 나열했습니다. 한 가지 강력한 예는 이행 기간 동안 5,000,000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소프트웨어 회사인 Kakao¹⁴가 매입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개발한 또 다른 앱을 통해 사용자는 안전을 위해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고 그것이 피부에 이상적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verybody's Parking 앱은 서울시 주차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면서 14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중입니다¹⁵. 중간보고서 완료된 프로젝트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정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사례들은 이 마일스톤이 “완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개방성에 기여했습니까?

정보접근성: 미미한

시민참여: 변화없음

이행 초기에는, 2013년 10월 정보공개법법 통과로 오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위한 대규모 노력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향후 이행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도 높았습니다¹⁶. 이 공약은 열린 정부의 “정보 접근”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docx 또는 이와 유사한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한글 파일유형 (대한민국 워드 프로세서인 한글인 사용한 .hwp)과 같이 모호한 파일 유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hwp에서 .docx로 파일을 변환하면 형식 및 가독성이 손상될 수 있기때문에 공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제니퍼 강 위원은 이러한 과제 때문에 공약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CSV 파일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신에 정부 웹 사이트는 읽을 수 없는 PDF 문서로 연결되는 데이터 범주인 “도시계획 시설정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강은 해당 사례 및 이와 유사한 사례¹⁷를 통해 .CSV 또는 읽을 수 있는 Excel 형식 대신에 .HWP 또는 .PDF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 웹 시스템에서 결여된 사용자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¹⁸. 정부 자체평가보고서는 또한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를 개선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¹⁹. 이 보고서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으로 민간 부문의 생산적인 공공 정보 사용이 계속해서 저해되고있다”면서 대규모 공공 데이터의 유용성을 개선하고 표준 형식을 만들며 오픈데이터 포털에 업로드된 데이터의 표준화를 평가하기 위한 자동화된 툴을 도입하기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이 다음 단계임을 확인했습니다²⁰.

사실, 정보접근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정부가 FOI의 요청 없이도²¹ 더 많은 데이터세트를 공개하면서, 2013년 정보공개법 시행과 함께 기본적으로 기밀유지 정책에서 공개쪽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낙관적인 견해가 많았으며, 두 번째 행동계획 이행기간 첫째 및 초반에는 이해관계자들도 보편적으로 이를 환영했었습니다²². 영남대 행정학과 황성수 부교수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진전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동계획 이행 기간 동안 오픈데이터가 “의미있는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CSO는 교통, 토지 이용 및 날씨²³와 같은 분야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데이터 세트의 공개가 개선되고 데이터 공개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데이터의 표준화, 조직화 및 유용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월 여부?

이 공약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보다 독자적인 오픈데이터에 관심을 둔 2016-2018년 2개년 행동계획에서 공약 1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CSO, 오픈넷 코리아 (OpenNet Korea) 및 인디랩 (IndiLab)은 정부가 데이터 공개를 보다 일관성있게 진행하기 위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제 카테고리에서 보다 일관된 데이터 공개 및 표준화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¹2015년 12월 12-16일. 행정자치부 연락담당자 이메일

²행정자치부, 이메일, 2015sus 12월 7일

³열린정부파트너십. "대한민국 2014-2015 IRM 진행보고서," pp. 35-39

⁴<http://open.eais.go.kr/>

⁵<http://www.openfiscaldata.go.kr/>

⁶2015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 이메일

⁷E2015년 12월 12-16일. 행정자치부 연락담당자 이메일. 연구원은 또한data.go.kr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로드되는 공개를 추적해 왔다.

⁸이 수치는 data.go.kr웹사이트에 보고되었으며, 접근가능하고 번호 아래 명확하게 표기된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실제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다.

⁹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 자체평가보고서, 2016년 9월, p.44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종합자체평가보고서_2014-2016.pdf

¹⁰Ibid.

¹¹오픈넷 코리아 담당자 겸 고려대 법대 교수인 박경신 교수의 2016년 10월 25일 이메일

¹²IRM 이해관계자 포럼, 2015년 9월

¹³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 자체평가보고서," (번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lf-Assessment Report), 2016년 6월, pp. 25-28. 연구원은 data.go.kr웹사이트의 데이터를 검토하여 이 보고서의 주장을 교차확인하였으며, 자선가길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 무작위로 선정한 분야에서 데이터 세트를 검색하였다.

¹⁴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 자체평가보고서," 2016년 6월 (한국어)

¹⁵Ibid

¹⁶제1차 및 제2차 IRM 이해관계자 포럼, 2013년 10월 및 2015년 9월.

¹⁷기계판독 불가 .hwp 파일의 예 "보건복지부" <http://data.go.kr/dataset/3074575/fileData.do>, 및 "보건복지부" <http://data.go.kr/dataset/3033511/fileData.do>

¹⁸2017년 4월 21일 제니퍼 강 인터뷰

¹⁹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열린정부파트너십 자체평가보고서, 2016년 9월, p.46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ites/default/files/South-Korea_종합_자체평가보고서_2014-2016.pdf

²⁰Ibid

²¹대한민국, "정보공개법 2013." 법안 사본은 IRM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다.

²²제1차 및 제2차 IRM 이해관계자 포럼, 2013년 10월 및 2015년 9월

²³<https://www.data.go.kr/emphasisData/index.do>

방법론적 특징

공약은 원래의 OGP 행동계획에 기반하여 분류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 프로그램, 인터뷰 및 시민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서신, 법률 및 규정 초안, 정부 시행령, 두 건의 정부 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중간자체평가보고서는 2015년 10월에 제출되었으며 한국어로 작성된 2 차 정보평가보고서는 2016년 6월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자체평가보고서는 2016년 9월 한국어 및 영어로 발간되었습니다. IRM 연구원은 또한 행동계획의 완료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및 국제 언론과 서면으로 진행한 협의를 활용하였습니다.



제프리 캐인(Geoffrey Cain)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자 기자인 동시에 컨설턴트이다.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은 제프리 캐인은 런던 동양 아프리카연구학원 및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다.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열린정부파트너십 (OGP)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부여, 부패척결,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신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GP의 독립보고기구는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증진시키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을 평가한다.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Open Government Partnership
c/o OpenGovHub
1110 Vermont Ave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

Open
Government
Partnership

